

국회 '가상자산 논란'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윤리특위 징계안 상정...자문위 최장 60일 활동 징계수위, 특위 의결 거쳐 본회의서 최종 표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상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의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는 한편,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현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나 민주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자료들을 자문위에 제출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 출석 여부도 논의됐다.

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변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상수 의원(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재일 위원장. /연합뉴스

민주·정의당 원내대표 회동 "민생법안 협력하자"

정의당, 민생 추경·전세사기특별법 후속 입법 추진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만나 1년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배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은 한번 (조선)인데 원내대표는 세 번째니, 직업이 원내대표 같다"며 "그만큼 역량과 추진력이 좋고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하다는 것"이라고 덕담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간호법 같은 중요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서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 염려가 크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치도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력기 때 중요할 시기라는 점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남은 1년간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을 정의당과 협력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원내대표는 "이런 때일수록 야당이 야당에게 정책적 논의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른바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전세사기특별법 후속 입법을 함께 추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최근 경제위기에 국민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며 "박 원내대표도 말했던 것처럼 추경 논의는 지금 국회가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사안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전세사기특별법에 저희가 참여했는데 후속 입법도 중요할 것 같다"며 "국회 내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추가 입법 과정을 밟자"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포괄입금제 폐지 등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동 공약 가운데 7개 정도는 추진할 수 있다"며 "3당 협력이 어렵다면 민주당과 정의당만이라도 정책위 차원에서 협의해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권익위, 특혜 채용·가상자산 조사 착수

전현직 국민권익위원회장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국회의원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계 심리를 꺼져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서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6월 1~30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

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다만 (국회의)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관련 정보가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또한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의지도 표명했다.

전 위원장은 "장·차관과 고위공직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반드시 회피해야 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고액 수입료 의혹'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양 "모든 절차 적법...정치 탄압"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입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협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입료를 갱진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정치적 탄압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소환조사 등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성실히 응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는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혐의 내용을 흘리는 등 경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는 결국 양부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령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절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